

민생법안 처리 0건...경제위기 공전국회 비난

양당, 원 구성 놓고 대치로 갈등 골만 깊어져

정국 주도권 노려 지지층 결집 의식 정쟁 과열

여야가 갈수록 민감한 쟁점들을 끌어모아 강대강으로 충돌만 하면서 여름정국이 열어붙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여야는 원 구성은커녕 민생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정치권에서는 6 월 국회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불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시달리며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여야는 협치 대신 대치만 격화하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세비 반납 등의 비단이 쇄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나날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가 뜨거운 쟁점들을 조

속히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선거가 끝난 뒤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자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적 포석에만 골몰하면서 정국의 파고만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 당에서 당 주도권 경쟁으로 내용에 깊어지고 있는 것도 일하는 국회를 등한시하고 개점휴업을 자초한 셈이 됐다.

각 당에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발동 것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는 전반기의 악순환을蹈(반복)하는 양상이다.

여야 간 협치의 시발점인 원 구성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됐지만 한 달째 서로 양보만 요구하면서 정치력 '월북물이' 의혹 규명 TF를 구성하

고 인권위·해경·국방부·통일부·외교부를 차례로 순회하는 등 당 차원에서 회력을 쏟아붓고 있다. 더불어민국 특위,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으로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NLL 대화록 유출 의혹' 공방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해 야권의 친문진영을 향해 화시킬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사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거론하는 등 책임론을 제기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안보를 정쟁 수단으로 삼은 '신(新)색깔론'이란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뉴스

김건희 부정평가 56.3%
국민 과반 "역할 줄여야"

국민 과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가 29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 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를 앞지른 가운데 김 여사마저도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테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김 여사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다'는 응답이 56.3%로 아주 잘못한다 41.4%, 다소 잘못한다 14.9%로였다.

'잘한다'는 응답은 36.6% (아주 잘 한다 13.3%, 다소 잘한다 23.3%)로 잘못한다는 응답과 19.7%포인트 차이가 났다. 오차범위 밖의 차이다. 이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56.9%)과 여성(55.8%) 모두 과반이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의 부정 평가는 6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66.1%), 50대(61.6%), 18~29세(55.5%), 60대 이상(42.0%)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수록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 등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과거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 이 영상들이 증거로 사용돼 별도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헌 결정 이후로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갈수록 민감한 쟁점들을 끌어모아 강대강으로 충돌만 하면서 여름정국이 열어붙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여야는 원 구성은커녕 민생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정치권에서는 6 월 국회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불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시달리며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여야는 협치 대신 대치만 격화하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세비 반납 등의 비단이 쇄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나날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가 뜨거운 쟁점들을 조



손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민주당 워크숍 참석자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자체단체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輿 반도체특위원장 양향자, 광주전남반도체특화단지 활약 기대

정치적 '반신반의' 분위기 속 지역발전 견인 기대감 고조
광주·전남 상생공약1호 강기정시장·김영록지사와 교감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친야 무소속' 인사로 '국민의 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광주서구을)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 의원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지역에선 정치적으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간접하면 양 의원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특위 자문위원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고, 강 당선인도 특위 출범식 날 양 위원장에게 전화통화로 도움요청과 함께 덕담을 한 것

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이 강 당선인의 정책통인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현 민

선8기 광주시 인수위원장)를 자문위

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

인 교감의 산물로 평가된다.

여야를 초월한 반도체산업을 통한 국가·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전날 특위 출범식에서 "정치에 들어선지 7년, 반도체 산업이 이념화되고 정쟁화 될까봐 늦을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현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의 정파가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이라며 "정책 결정의 속도를 그들보다 더 빠르게, 지원의 의지와 규모를 더 담대하게, 정책의 구체성을 현장에 맞도록 높여야만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 온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MB 형집행정지, 사면 수순 돼선 안 돼"

"황제 접견" 호사스러운 수감생활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별금 미납 등 조건의 반성도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여러 차례 장소 변경 접견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뉴스

민주 "의장단 선출"...단독 원구성 드라이브

"결단의 시간...국회, 민생 직무유기 안 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명분 삼아 사설상 단독 원구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여야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선거 승리에

도취돼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 않는 오만한 그 자체"라며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뻥소니"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만장 일치 박수로 주인해놓고선 양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나"라며 "입법부에 서초조 평균처럼 행세하며 원내 1당을 발목 잡기 세력으로 공격하는 데만 재미들린 게 국민의힘"이라고 짚어 물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으로 떠난 것을 겨냥해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좀챙기라 했더니,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 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내수석부대표 등에 전권을 위임해서라도 민주당처럼 통 큰 양보인을 바로 제시해 말로만 이 아닌 진짜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 당대표 출마... "위기 극복"
"역동적 통합 리더십으로 일하겠다"

한 당내 운정주의 그리고 패배의 무기력함과 단호히 결별하고, 철저한 반성과 혁신, 통합과 단결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묻고 또 물었다.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가 돼 당을 이끌 비전이 있는지,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췄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당의 위기·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당이 위기다. 당원께서 만연

이어 "리더십이 위기다. 공적 책임감과 혁신성으로 무장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해야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저는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씨를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뉴스

野, 지도체제 내달 4일 의결 예상

일반 국민 비율 증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9일 지도체제와 관련해 "다음주 전준위 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이후에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를 높여야 전당대회 운영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목표로 잡고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로 국민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 전반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준위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비율도 숙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인단 구성과 비율, 예비경선 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며 "구체적 논

호 매 만 펑

이태현

